

“종교지원, 정교분리·공공성·형평성 기준으로 재정립해야”

한국기독언론협회, 제1회 종교정책 심포지엄 개최

한국기독언론협회가 2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회 종교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종교 관련 국가 보조금 지원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재성 소장(바른기독교바른정치연구소)과 장현일 박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가 각각 주제발표를 맡았다.

두 발표자는 종교 관련 국가 재정 지원이 정교분리 원칙과 공공성, 종교 간 형평성 측면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도, 단순히 종교별 지원액의 균등 배분을 요구하기보다 공공성을 중심으로 지원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순한 종교별 지원액 비교에서 벗어나야”

김재성 소장은 “종교 관련 국가유산 보조금 지원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현재의 종교 관련 보조금 정책을 둘러싼 비판과 함께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반론을 함께 제시했다.

김 소장은 “국가의 종교행정은 종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집중해야 하며, 현재의 보조금 중심 종교정책은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종교와 정치의 부적절한 유착을 초래한다”는 기존 비판을 소개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예산이 1999년 약 27억 원에서 2026년 1,043억 6,000만 원으로 증가한 점과 2026년 종무실 예산 가운데 개별 종교 대상 예산

비중이 95.7%에 이른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불교 관련 예산은 81.9%, 천주교 6.6%, 개신교 4.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소장은 종교 관련 국가유산 보조금을 모두 정교분리 원칙 위반으로 규정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통사찰 국고 보조금은 헌법 제9조의 문화국가원리에 따른 문화유산 보호정책”이라는 논리가 가능하다고, 국가가 특정 종교의 포교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이라면 정교분리 원칙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반론을 소개했다. 헌법 제관소 역시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보존 지원에 대해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합헌으로 판단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이에 따라 기독교계의 대응 방향도 단순한 종교별 지원액 비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왜 저 종교만 지원하느냐”는 비판보다는 “왜 어떤 종교의 문화자산은 제도적으로 축적되고, 어떤 종교의 역사자산은 그렇지 못한지를 묻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범교단 차원의 협의체와 실행기구를 상설화하고, 선교 유적과 근대 교회 건축물, 순교지, 교육·의료·선교 관련 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국가유산 지정과 등록, 세계유산 등재까지 추진



한국기독언론협회 제1회 종교정책 심포지엄이 진행되고 있다. ©장요한 기자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보조금의 배분 기준과 심사 과정, 사후 정산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종교 관련 예산을 비교할 수 있는 예산 백서를 매년 발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균등 배분”이나 “보조금 전면 폐지 또는 축소”보다 “국민 세금에 특정 종교의 선교·확장 목적이 아니라 공적 가치가 검증된 문화유산 보존에 쓰여야 한다”는 원칙을 중심으로 뒤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단체 자체 지원보다 사업 공공성 기준으로”

이어 장현일 박사는 ‘한국 종교지원정책에 대한 문제점 및 정책 대안’ 발표에서 종교지원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정교분리 원칙의 실질적 훼손 △종교 간 예산 배분의 불균형과 형평성 상실 △종교의 자율성 및 예산자적 기능 저해 △공공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정당성 부족 등 네 가지로 제시했다.

장 박사는 “헌법상의 원칙은 유명무실해지고, 정치와 종교의 공생적 ‘매패 행정’

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선거를 앞둔 정치권과 종교단체 사이에서 국가 재정이 매개가 될 가능성을 경계했다. 특히 종교시설 건립이나 행사 지원 등이 특정 종교의 자산 형성과 포교 활동에 작간접적으로 기여할 경우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종교의 국가 재정 의존 문제도 지적했다. 장 박사는 종교사회학자들의 논의를 인용해 정부 보조금이 종교단체의 자립과 쇄신보다 국가 예산 확보에 집중하게 만드는 ‘보조금 중독(Subsidy Addiction)’ 현상을 설명했다. 그는 “정부 재정에 길들여진 종교는 비판과 자정 능력을 잃는다”고 지적하며, 국가 재정에 의존하는 종교단체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권력의 문제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박사는 해외 사례를 들어 한국의 종교지원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프랑스의 엄격한 정교분리, 미



이날 심포지엄 주제발표자로 나선 (왼쪽부터) 장현일 박사와 김재성 소장 ©장요한 기자

국의 종교 중립성을 전제로 한 공익사업 참여, 독일의 국가와 종교 간 협력 모델을 비교하면서, 한국 역시 종교단체 자체를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의 공공성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는 종교 관련 지원 기준을 일반 공공정책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문화유산은 종교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유산 보존 기준에 따라 관리하며, 사회복자관광 사업은 일반 민간단체와 동일한 경쟁과 평가 기준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종교 관련 보조금의 지원 내역과 집행 과정, 정산 결과를 공개하고 사업 종료 후 성과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정책, 헌법적 가치와 공공·형평성 원칙 속에서”

한편, 발표에 앞서 주요 참석자들의 축사 및 격려사 등이 있었다.

한국기독언론협회 지도목사인 정성진 목사는 서면 격려사에서 “종교와 국가의 관계는 단순히 어느 종교가 얼마의 예산을 지원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라며 “국가의 지원은 어떤 공공적 가치와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종교는 국가와 어떤 건강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함께 묻는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정찬수 목사(한국교회총연합회 법인사무총장)는 축사에서 “한국교회는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 특히 교회가 자유롭게 그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의 공공성에 기여하기 위해 고민해야 할 때”라며 “한국교회가 마주한 종교 정책과 제도의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고 교회와 정부, 국회와 사회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비로소 마련된 것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김도형 종무실장은 서면 축사에서 “학계, 언론계, 종교계가 한 자리에 모여 종무행정 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이번 공론의 장은, 보다 발전적인 종교 정책을 수립하는 데 귀중한 나침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기독언론협회 노근재 회장은 “정부의 종교정책은 특정 종교에 대한 지원이나 배제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와 공공성, 그리고 형평성의 원칙 속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대한민국 종교정책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한 단계 높이는 작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약물 낙태, 여성 권리 아냐… 정부, 도입해선 안 돼”

태어연·생명운동연합, 청와대 앞 기자회견 갖고 ‘태아 생명권’ 강조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태어연)과 생명운동연합이 이재명 대통령의 ‘먹는 낙태약’ 도입 검토 지시를 규탄하며 정책 철회

“콜롬비아 강진, 기독교 공동체도 피해 당해”

7면

포크싱어 한세화, 첫 음원 ‘고마워요 내 사람’

24면

를 촉구했다. 두 단체는 20일 청와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및 규탄 집회를 열고, 정부에 ‘먹는 낙태약(임신중단의약품)’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주최 측은 “유례없는 인구 절벽과 국가 소멸 위기 속에서 정부가 모성과 태아를 살리고 양육을 지원하는 근본적 대책 대신 가장 연약한 태아의 생명을 지우는 약물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적 자멸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길수 목사는 “약물 한 알로 생명을 쉽게 지우는 것은 결코 ‘여성의 권리’나 ‘진보’가 아니며, 국가가 져야 할 출산·양육 책임을 사회적 약자에게 떠넘기

는 일”이라고 했다.

주최 측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의 벼랑 끝에서 있다”며 “한쪽에서는 매년 수십조 원의 혈세를 쓰며 출산을 장려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국민의 세금과 건강보험 재정으로 태아의 숨통을 끊는 약물 도입을 밀어붙이는 극단적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생명의 가치는 정권의 입맛이나 정부적 판단에 따라 거래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며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국가에는 미래가 없다”고 했다.

주최 측은 △이재명 대통령의 ‘먹는 낙태약’ 도입 검토 지시 즉각 철회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들의 정책 지시에 대한 양심적 대응 △사회단체

의료계·종교계·국회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국민 대토론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이날 현장 발언도 이어졌다. 정승민 원장(산부인과 간호사, 조산사)은 “태아는 생명이 아니고 세포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그래서 낙태가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태아는 그 주수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생명”이라고 했다.

정 원장은 “그러므로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생명의 존엄론적 가치는 부모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닌 그 자체로 절대적인 것”이라며 “그리고 효과와 안정성에 의문이 많은 낙태 약물을 도입하는 것은 여성들의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은호 신부(카톨릭생명대학원)는 “여

성들을 불법 낙태약에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점에는 동감하지만 그렇다고 낙태약을 합법화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점엔 동의하기 어렵다. 그것은 또 다른 무책임한 선택”이라고 했다.

박 신부는 “낙태 약물 도입 문제는 대한민국이 생명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우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의 도덕적 양심을 결정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약물 낙태는 생명권을 개인의 선택 아래 종속시킬 것다.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는 결국 수많은 다른 약자들에 대한 연대의 기반마저 흔들 것”이라고 했다.

현재 임신 중이라는 한 여성 발언자는 “약물 낙태는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약물 낙태는 여성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국가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무고하게 죽어야 할 생명이 없



낙태약 도입 반대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다. 생명에 대한 책임은 낙태로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그 사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두 단체는 정부의 정책 철회가 관철될 때까지 청와대 집회와 릴레이 1인 시위, 전국민 서명운동, 전문가 토론회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진영 기자

사통팔달 강원시대가 시작됩니다.

